

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4-6】

2014. 3. 13

러시아·EU의 경제블록화 전망과 시사점

목 차

I. 러시아·EU의 경제블록 확대 의도	1
II.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으로 러시아·EU 갈등 확대	3
III. 경제블록화의 전망 및 시사점	4

작성 : 국별조사실
선임조사역 김찬수 (3779-5703)
avik@koreaexim.go.kr

확인 : 국별조사실
실장 김주영 (3779-5702)
jykim@koreaexim.go.kr



■ 201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와 EU는 각각 경제블록 확대를 위해 구소련¹⁾ 국가들의 가입을 적극 추진중임. 각축장이 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경제블록화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.

I. 러시아·EU의 경제블록 확대 의도

□ 러시아와 EU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구소련 국가들의 가입을 통한 경제블록 확대로 시장영향력 증대 도모

<추진목적>

- (러시아) EEU(Eurasian Economic Union)²⁾ 구축을 통해 상품, 서비스, 자본, 노동의 이동자유화는 물론 단일통화 사용 등 경제적 단일국가 추구
- (EU) EU EP(Eastern Partnership)³⁾ 추구로 구소련 6개국과의 자유 무역, 비자면제, 경제협력 등을 통한 EU 영향력 확대

<추진경과>

- (러시아)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2000년 이후 강대국으로 재부상한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 통합 작업을 추진
 - 2010년 1월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관세동맹을 확대·발전시켜 2012년 1월 공동경제구역을 구축함.

1) 러시아·우크라이나·벨로루시·우즈베키스탄·카자흐스탄·아제르바이잔·몰도바·키르기즈·타지키스탄·아르메니아·투르크메니스탄·조지아·에스토니아·라트비아·리투아니아 등 15개 국
2) 러시아가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(후보국: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옵저버: 우크라이나)
3) EU가 조지아, 몰도바, 아제르바이잔, 벨로루시, 아르메니아,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준가입국 지위를 부여하는 EU 확대정책의 일환



- 러시아는 2015년 1월 EEU 정식 출범을 목표로 2014년 5월까지 EEU 창설 조약 체결, 2014년 말까지 가입국 의회 비준을 계획함.
- 러시아는 EEU를 단일통화 사용 등 경제적 단일국가 형태인 EAU (Eurasian Union)로 발전시켜 EU에 대응할 계획
- (EU) 동구권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며 구소련 국가까지 확장 계획
- EU는 2004년 EU EP 구상 추진을 발표한 후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등 6개국과 협상 중

<그림 1> EU와 EEU의 경제블록 확대추진 현황



□ 경제블록 확대의 핵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

- (러시아) 우크라이나는 EU 동진전략을 막는 저지선 역할을 하며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통로임.
- (EU)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(45백만 명)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확대와 동진전략의 거점임.



<그림 2> 우크라이나 인근 지도



<표 1> EU와 EEU의 인구·GDP 등 비교

단위: 백만명, 달러

	인구	GDP	1인당 GDP
EU (28개국)	510	17.2조	33,758
EEU (3개국)	170	2.4조	14,163

II.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으로 러시아·EU 갈등 확대

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

- 2013년 8월에 우크라이나의 EP 가입계획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철강, 우유, 초콜릿 등 수입금지 실시
 - 러시아는 2013년 10월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시 EEU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.
- 러시아는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33% 인하 계획을 발표함.

□ EU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의 부당관세에 대해, 러시아는 EU의 자국산 철강 등의 불공정관세에 대해 상대방을 각기 WTO에 제소

- EU는 2013년 10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세(recycling fee) 부과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함. 또한, EU는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중
- 러시아는 2013년 12월 자국산 철강과 비료에 대한 EU의 불공정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함.



□ 발트 3국 등은 EU로, 카자흐스탄·벨로루시 등은 러시아로 편입

- (발트 3국 등) 2004년 EU 가입 이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유로존에 가입함.
 - 조지아⁴⁾와 몰도바는 2013년 11월 말 EU와의 EP 협력협정에 가서명함.
 - 아제르바이잔은 자원부국으로 대 러시아 경제의존도가 크지 않고 러시아와 경제통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EU와 협상중임.
- (카자흐스탄, 벨로루시 등) 러시아와 2010년 관세동맹 체결
 - 러시아는 2013년 12월 말 벨로루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함.
 - 아르메니아는 EU와 EP 협력협정 체결 추진 중 러시아가 자국과 분쟁중인 아제르바이잔에 무기 수출 등으로 압력을 가하자 2013년 9월 초 관세동맹 가입을 선언함.

Ⅲ. 경제블록화의 전망 및 시사점

□ EEU 중심으로 러시아의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블록화 추진

- 러시아는 벨로루시, 카자흐스탄 등 관세동맹 가입국을 중심으로 여타 구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경제통합을 추진 중임.
- EEU에는 관세동맹 가입국 외에 집단안보조약기구(CSTO)⁵⁾와 상하이

4) 2014년 2월에 향후 5년 내에 EU 회원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힘.

5) 집단안보조약기구(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): 1992년 5월 체결된 집단안보조약(아르메니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, 러시아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 가입)에 기원을 두며 이후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벨로루시가 가입함. 현재 CSTO 가맹국은 러시아, 벨로루시, 아르메니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 등 6개국임.



협력기구(SCO)⁶⁾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의 가입 가능성이 있음.

- 집단안보조약기구, 상하이경제협력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국은 러시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임.
- 또한 러시아는 EEU 추진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며 향후 터키, 인도 등을 포함하는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함.

□ 그러나, 러시아의 EEU 경제블록 확대는 우크라이나 가입 불투명 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적 유인으로 EEU에 더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진경제권 편입,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지속적인 욕구 표출로 EU EP 편입 가능성이 더 큰 편임.
- 또한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여타 구소련 국가의 러시아 통제 강화에 대한 경각심 확대 등으로 러시아의 EEU 경제블록 확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.
-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유혈충돌을 기록한 2월 20일 러시아 야권의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러시아 편입 주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함.
-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에 대해서도 경제분야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, 자주권과 헌법을 위배하는 국제조직에서는 탈퇴하겠다고 강조함.

□ 러시아와 EU의 경제블록 확대경쟁에 따른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미미

6) 상하이협력기구(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): 2001년 6월 창립되었으며 러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구성됨. 이란, 몽골, 인도, 파키스탄, 아프가니스탄이 옵저버로, 벨로루시, 스리랑카, 터키가 대화동반자로 참여하고 있음.



- 러시아 수출에서 대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%를 상회하고 러시아 수입에서 EU 제품의 점유율은 45% 수준임.

<표 4> 러시아의 대EU 수출입현황

단위: 억 달러, %

	2010년		2011년		2012년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수출	1,993	12.2	2,019	53.3	1,865	52.9
수입	913	43.2	1,258	45.1	1,307	45.0

자료: World Trade Atlas.

- EU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공급을 의존하고 있고, 러시아 입장에서 대 EU 의존도가 높아 전면적인 무역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음.
 - EU는 2012년 기준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의 64.8%를 수입함. 또한 EU는 전체 가스 수입의 29.1%를 러시아에 의존함.
- EU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도입 등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.
 - 2013년 6월 BP 주도의 Shah-Deniz II 국제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대 유럽 가스 공급노선으로 TAP⁸⁾를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, 동 계약에 따라 TAP를 통해 25년간 100억 m³를 유럽에 공급하게 됨.
 - Shah-Deniz II 국제컨소시엄은 2013년 9월 이탈리아, 그리스, 불가리아 등 유럽 9개 가스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.

7) 2013년 1~9월 EU는 러시아로부터 2,14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함.

8) Trans-Adriatic Pipeline으로 수송용량은 연간 100억 m³로 향후 연간 200억 m³까지 증대될 예정임.



□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적극 활용 필요

- 러시아는 2030년까지 총 에너지수출 대비 동북아 등 아시아지역 석유 및 가스 수출 비중 목표를 각각 25%, 20%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전망이다.
-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비중은 원유과 천연가스가 각각 4.4%, 5.9%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.
-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·가스 자원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

작성 : 국별조사실
선임조사역 김찬수 (3779-5703)
avik@koreaexim.go.kr

붙임: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경과와 전망



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경과와 전망

□ 우크라이나의 EU EP 가입 중단에 따른 반정부시위가 직접적인 배경

- 2013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EP 가입 중단을 선언함.
-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대한 반발로 EU EP 가입 지지시위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반정부시위가 지속됨.
 -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진경제권 편입,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욕구 표출

□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민족 구성,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동서간의 갈등도 일조

- 우크라이나 서부는 우크라이나인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이 강한 반면, 상대적으로 러시아계⁹⁾가 많은 동부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옴.
 - 특히 서부지역은 스탈린 시절 구소련 정권의 횡포로 약 1,000만 명이 굶어 죽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큼.
- 경제적으로 동부는 공업지역, 서부는 농업지역으로 발전 격차를 보임.
 -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서쪽에서는 친서방 후보인 유셴코(2005~2010년 대통령), 티모셴코(2005년, 2007~2010년 총리)를, 동부에서는 친러 후보인 야누코비치를 지지함.

9) 우크라이나 민족 구성: 우크라이나계 77.8%, 러시아계 17.3%



□ 우크라이나는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

- 우크라이나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, 외채 증가 및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디폴트 위기가 지속됨.
 - 대외채무: 우크라이나 외채 규모는 '13년 말 기준 1,431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81.5%에 달함.
 - 외환보유액: '13년 말 외환보유액은 '12년 말 227억 달러 대비 약 17.1% 감소한 188억 달러에 그침
 - 경상수지 적자 누적 → 대외채무 증가 → 외부충격 → 경기하강 →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→ 대외채무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
- EU는 우크라이나의 정치·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3월 초 차관과 무상공여 등 110억 유로 규모¹⁰⁾의 지원 제공을 밝힘.
- 한편, 세계 주요 평가기관들은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.
 - S&P는 1월 말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-에서 CCC+로 하향조정한 이후 디폴트 가능성 등의 이유로 2월 말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CCC로 강등함.
 - 무디스는 2013년 9월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강등한데 이어 2014년 1월 말 Caa1에서 Caa2로 하향 조정함.
 - 피치는 2월 초 디폴트 위기와 러시아의 차관지원 이행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B-에서 CCC로 두단계 강등함.



□ 반정부 시위로 야누코비치 퇴진 및 친EU 과도정부 구성

- 2014년 1월 중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집회시위규제법 통과 이후 반정부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격화됨.
- 2014년 1월 말 아자로프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하고 집회시위규제법 폐기안이 발표됨.
-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로 2014년 2월 18일부터 3일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.
-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22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야당 지도자 티모셴코¹¹⁾ 전총리를 석방함.
- 또한 의회는 대통령 권한을 투르치노프 의회의장에 이전하고 5월 25일 조기 대선을 결의함. 의회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일원이 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힘.
- 우크라이나 의회가 2월 27일 야체뉴크 조국당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하는 등 과도정부를 구성함.
- 러시아는 3월 초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흑해함대 병력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주요 시설에 배치하는 등 크림반도를 장악함.
- 한편,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3월 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¹²⁾를 3월 16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함.

10) 차관 16억 유로, 무상 공여 14억 유로, EBRD 50억 유로, EIB 대출 30억 유로

11)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주역으로 2007~2010년 총리. 2010년 대선에서 야누코비치에 패배한 이후 2011년 직권남용죄로 수감됨. 친서방 인사로 집권시 EU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.

12)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50%를 넘으면 크림자치공화국은 합병절차를 진행함.



- 전체 200만 명 수준의 주민¹³⁾ 가운데 러시아계가 58.5%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투표결과 ‘분리독립’ 찬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큼.

□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시 우크라이나 EU 통합 가속화 가능성

-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미국·EU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크림반도 합병을 모색하는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됨.
-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추진하는 반면, 러시아는 4월부터 가스 공급가격 할인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압박함.
-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이 가시화되면 우크라이나 내 친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가 EU에 더 빨리 통합될 가능성이 큼.
- 하지만, 러시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리하여 동부지역 친러정권 수립에 집착할 가능성도 있음.

13) 러시아계 58.5%, 우크라이나계 24.4%, 타타르계 12.1%, 기타 5%

